

# 농정토막 소식

##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농식품부, 내년 15곳 대상... 1곳당 5년간 80억 지원  
복합서비스센터 · 도농교류센터 · 문화공간 등 조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중심지(읍·면 소재지)를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 및 배후마을에 대한 복합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2015년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총 15개소로 6월 선정을 마쳤으며, 2017년까지 50개소로 확대된다. 선정된 중심지에는 5년간 개소당 8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심지를 이 단위 마을 등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문화·복지·공동체의 중심지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즉 복합서비스센터, 도농교류센터, 생활친화형 문화·체육 공간 등을 조성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생활권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마을마다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은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경남 거창군 거창읍은 각급 학교가 밀집된 중심지를 주민 중심의 교육·문화 커뮤니티와 복합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과거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읍(동)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지역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식인 데다,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대다수 사업처럼 지원기간 종료 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을별 사업추진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공동체 회사 등으로 만들고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의 지원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농민신문 8.15)

## 정부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팔 걷는다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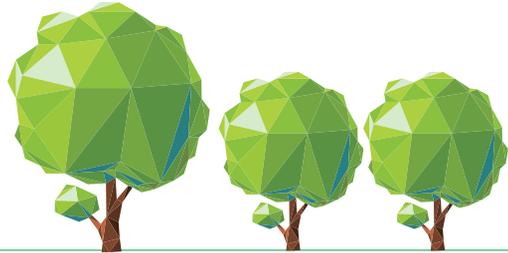
정부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1면 1개 초등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농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섰다. 특히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를 확대하고 각종 자연재해에도 안심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2015~2019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관계부처 및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보건·복지분야), 1면 1개 초등학교 유치(교육분야), 농어촌형 문화공간 조성(문화·여가분야) 등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위한 각 분야별 특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확대할 계획도 내놨다. 또 안전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포함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을 통해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홍원 위원장은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추진해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촌도 살고 싶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삶의 질 계획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대안이 들어가야 한다”며 “농민들이 제 삶을 영위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8.15)

### 국산쌀 경쟁력 높이기 위해… 단일품종표시제 정착 시급 순도 80% 이상일 때 표시 가능…지난해 표시율 25.2% 머물러

정부가 쌀 고품질화를 위해 추진한 단일 품종 표시제(양곡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쌀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일 품종 표시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쌀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등 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 품종 표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단일 품종 표시율 저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고품질화를 위해 2007년 1월1일 양곡표시제를 본격 도입했다. 품종·생산지 등을 쌀 포장지에 의무표시토록 한 것이다. 품종명의 경우 해당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일 경우(새추청)〈삼광〉 등 단일 품종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일 품종으로 표시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0년 20.9%, 2011년 26%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주부교실에 위탁해 실시했던 양곡표시율 이행실태조사에서도 25.2%에 머물렀다. 시중 유통되는 쌀의 4분의 3이 혼합으로 표시된 채 팔리고 있는 것이다.

농관원은 단일 품종 표시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자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양곡표시제와 비슷한 취지로, 쌀 포장지에 농관원의 관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품종명 스티커가 부착된다. 하지만 7월 현재 전국 234개 미곡종합처리장(RPC) 가운데 92개(39.3%)만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농관원이 참여 업체의 원료곡에 대해 연 6회 이상의 품종검정 지원 및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참여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92개 업체에서 스티커를 부착해 출하하는 쌀의 비율도 10~15%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자 인지도 향상 선행돼야 = 쌀 단일 품종 표시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RPC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쌀 품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쌀을 구매할 때 ‘이천쌀’, ‘경기미’ 등 지역을 우선 고려하지 품종이 무엇이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단일 품종 표시 쌀에 대한 낮은 선호도가 단일 품종명 표시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품종이란 무엇이고 품종별로 밥맛 등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 충남 논산 연무농협 RPC 장장은 “공익광고 형태로 쌀의 품종을 소개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쌀 품종명 표시 확대를 위해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제도를 일부 개선해 스티커 부착 방식이던 관리마크를 포장재 인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고, 벼 수확기에 실시되는 우수 RPC 인센티브 평가에서 단일 품종명 표시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자료 : 농민신문 8.6)

**우리나라 영농기술, 카메룬에 전수... 벼 재배단지 조성  
2018년까지 벼 재배단지 활용 교육연구시설 조성**

정부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선진 영농기술을 전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카메룬 센터주 호테사나가군에 '카메룬 벼 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1년~2014년까지 진행된 '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이은 것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1차 산업으로 지원한 벼농사 시범단지를 이용해 종자개발 및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경지 20ha에 대한 △교육연구센터(교육동, 숙박동 등) 건립 △추가 농경지 조성(40ha 이내) △시범농가에 대한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한국초청연수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카메룬 수도 야운데 현지에서 농업농촌부 본도 나 피트릭(MVONDONNA Patrick)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사업실시 의사록에 서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영농 교육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벼 품종개량 기술보급과 선진 기계화 영농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카메룬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8.5)

**친환경농업 위축... 돌파구 찾아야  
일부 인증기관 문제... “소비자신뢰 지켜야 살길”**

친환경농업이 내우외환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가 급증한 데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 가격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언론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져 소비자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와 농업계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친환경농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 규모 축소 =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3753농가를 적발해 인증을 취소했다(본지 8월1일자 2면 보도). 특별단속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지난해까지는 하지 않던 이앙·파종 시 농약 사용에 대한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수도 계속 줄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09년 19만8891호에서 2013년 12만6746호까지 떨어졌다. 올해에도 2만1000여호가 줄어 7월 현재 10만 5734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9년보다 46.8%가 줄어든 것으로, 10만호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118만1425t으로 2009년의 235만7774t에 견줘 반토막 수준이다.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됐고 2016년 저농약 인증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관행농산물 가격보다 유기농산물은 2배, 무농약은 1.7배, 저농약은 1.6배 높았다. 그러나 관행과 친환경 농산물 가격 차이는 계속 축소돼 올해에는 유기·무농약 모두 관행의 1.5배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저농약농산물은 0.8배(올해 1~6월 기준 참외·오이 등 6개 품목 대상)로 관행농산물보다 싼 웃지못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 요구 높으나 신뢰도엔 타격 = 농업계 외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관련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 친환경농업은 큰 충격을 치렀다. 일부 지자체의 그릇된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과 이윤만을 추구해 부실한 인증을 남발하던 일부 민간인증기관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의향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자 가운데 80.5%가 현행 소비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얘기다. 현재 제기되는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의식 수준을 높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 : 농민신문 8.4)

